

5월 첫째 주 정세동향

2010년 5월 6일 목요일

01	세계경제	골드만삭스의 사기혐의에 대한 소송 내용과 향후 전망
03	세계정세	미국 이민개혁법 그리스 긴축정책
05	한국경제	특이사항 없음
06	한국정세	미·중·러 '북6자회담' 희망, 한국 '천안함 올인' 진보신당 고전 한나라당 전교조 명단 공개 MB-한나라당 지지율 동반상승 - '천안함 침몰 이전 회복' 오세훈-한명숙 대결구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결정
06	노동	총연맹 - 근심위 날치기 - 지방선거 체제 돌입 금속 - 금속노조 개악노조법 무력화 투쟁 선언 - 5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측, 금속산업 최저임금 동결 요구 기타 - 운수노조 철도본부, 교섭 진전 없으면 5/12 파업 돌입
20	여성	특이사항 없음

■ 세계경제

1. 골드만삭스의 사기혐의에 대한 소송 내용과 향후 전망

* 출처: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0-17호 / 2010. 4. 18 ~ 4. 24

1) 소송 내용

- 생략

*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혐의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서브프라임 주거용부동산담보부증권(RMBS)의 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인 아바쿠스를 설계하고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핵심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그 정보는 거대 헤지펀드인 폴슨앤드컴퍼니가 CDO를 구성하는 RMBS 선택과정에 개입했고, 폴슨앤드컴퍼니가 CDO 가치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신용부도스왑(CDS) 계약을 골드만삭스와 맺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간략히만 풀어서 설명하면, 폴슨앤드컴퍼니가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123개의 MBS를 선정하여 골드만삭스와 CDO

상품개발에 착수하면서 이를 숨기려고 제3자인 ACA 자산운용사를 형식적인 상품개발자로 내세웠다. 골드만삭스가 발행한 합성 CDO는 CDS 계약을 통해 CDO의 가치하락 위험을 위험매입자(보장매도자)에게 이전하는 구조를 지녔다. 실제로 2007년 아바쿠스가 팔리기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CDO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2008년 1월까지 아바쿠스에 포함된 MBS의 가격이 99% 하락했다.) 아바쿠스를 대량으로 구매한 금융회사가 큰 손실을 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신용파생계약에서 최종적인 위험매입자를 맡았던 ACA의 자회사나 신용파생계약을 중개한 네덜란드 ABN이 1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은 반면, 폴슨앤드컴퍼니는 이 계약을 통해 10억 달러의 이익을 챙겼다. 골드만삭스는 아바쿠스의 설계와 거래 과정에서 폴슨으로부터 1,500만 달러의 수수료를 벌었다.)

2) 소송 제기 배경

- 이번 SEC의 제소는 월가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와 감독당국의 의도로 해석. SEC는 다른 투자은행들의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것임을 밝힘.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의 ABACUS에서처럼 CDO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였던 Deutsche Bank, UBS, Merrill Lynch(BofA에 인수됨) 등이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됨.

- Wall Street Journal은 이들 기관도 모기지 증권 가치 상승에 베풀는 CDO(Deutsche Bank의 "START", UBS의 "TABS 2007-7", Merrill Lynch의 "Norma")를 발행하였고 헤지펀드들이 기초자산을 선정하는 데 개입하였으며 헤지펀드들은 CDO를 구성하는 모기지증권들에 대해 반대 포지션을 취했다고 보도. 이후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헤지펀드들은 대규모 수익을 거둠(2010.4.19).

- 또한 SEC는 이번 제소와 별개로 대형은행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에도 나서고 있어 월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대응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중. 특히 리먼 브라더스사가 대차대조표를 조작하기 위해 활용한 'Repo 105' 기법을 중점적으로 조사. (Repo 105 기법: 금융기관이 보유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100달러의 현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05달러 가치의 채권을 담보로 맡기는 관행을 의미하며 리먼 브라더스사는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매각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부채규모를 축소.)

-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SEC의 골드만삭스 제소에는 금융개혁법의 빠른 처리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 이에 대해 SEC 대변인은 표준 관행을 따랐으며 제소시기도 어떤 외부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 백악관도 SEC는 독립기관이며 이번 제소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

- 한편 일각에서는 Mary Schapiro SEC 의장이 '중이 호랑이'로 전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SEC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제소 건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음. SEC가 유가증권 사기혐의로 제소(2008.6.19)한 베어스틴스 펀드매니저 Ralph Cioffi와 Matthew Tannin에 대해 배심원단이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금융위기와 관련된 주요 제소 사건에서 패소. 또한 폰지 사기혐의를 받은 Bernard Madoff, 텍사스의 금융업자 R. Allen Stanford의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음.

3) 전망

- SEC의 기소내용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다 골드만삭스가 그동안 쌓아온 명성의 훼손을 막기 위해 소송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소송결과는 예측이 어려운 상태.

- SEC는 이번 제소와 관련하여 월가의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여론의 지지 확보에는 성공하였으나 상당한 리스크도 감수하고 있음. 먼저 허위부실표시 또는 누락행위의 중요성, 고의성 등 혐의 입증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 일각에서는 SEC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골드만삭스의 승산이 높을 것으로 전망. 이번 소송에서 골드만삭스가 승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① 골드만삭스의 거래행위가 업계의 관행으로 골드만삭스에 특유하거나 의도적이라는 SEC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② 투자은행이 매수와 매도 양측 고객을 위해 금융상품 구조를 만드는 것도 월가의 관행이라는 점 ③ 골드만삭스도 이번 거래에서 손실을 입어서 동사가 거래의 이익을 공유하고자 하였다는 SEC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 등임.

- 그러나 최근 골드만삭스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제소사건으로 골드만삭스는 그 동안 구축해 온 명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거액의 보너스 지급 논란, AIG와의 거래에 대한 의혹, 그리스 부채 은폐 및 내부거래 의혹 등이 연이어 불거짐. (그리스에 대한 재정자문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고객에게 유출.) 이번 제소건

이전에도 골드만삭스가 자사가 판매하는 CDO에 대해 하락베팅(short) 포지션을 취하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모기지 증권들로 CDO의 기초자산을 선정하여 결과적으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세계정세

1. 미국 이민개혁법

1) 美 민주당 이민개혁법안 공개 (매일경제, 5/6)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정책 개혁이 다시금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29일 새로운 이민개혁법안 발표. ▲국경보안강화 ▲이주 노동자에 첨단 신분증 발급 ▲합법 체류 지위 획득을 위한 새로운 절차 마련 ▲불법이민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이민개혁안을 발표하고 새 이민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인 공화당의 협력을 촉구. 상원 상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이민개혁법안은 지난주 멕시코와 남부 국경을 맞댄 애리조나주가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법안의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폭발적인' 주요 정치 현안으로 등장. 애리조나주는 지난 23일 주지사가 불법 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경찰관의 검문과 구금 등을 허용하는 법을 발효시킴으로써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미국 내 민권단체들로부터 인종차별정책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켜.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공개한 개혁안은 국경보안 강화를 위해 수천 명의 세관요원을 증원하고 2만여 명에 달하는 기존 국경경비대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부서 창설을 규정. 민주당 개혁안은 임시 취업 비자 발급 절차를 개선해 미국 내 일자리를 확보한 외국인 대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용이하게 했으며 또 미국 내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비(非) 미국인 체류자에 대해 임시 신분증 격인 첨단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토록 함. 미국 내 합법 노동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2단계로 구분해 먼저 미 당국에 '합법 예상 이주자'로 등록, 범죄 기록 조회를 허용하고 지문을 제공토록 한 뒤 2단계로 최장 8년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 영주권을 부여받도록 함.

그러나 사안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연내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인종차별 비난을 받고 있는 애리조나주 단속법안도 여론조사에서는 지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가 1천만 명을 넘는다는 통계도 일반 여론을 부정적으로 유도.

반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최대 유권자 그룹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히스패닉계 주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압력도 가중.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특히 대부분 중남미 출신인 불법 이주자들의 추방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법안이 마련되는데 강력히 반대.

2) 미 노동절에 대규모 이민자 행진, 워싱턴 뉴욕 시카고 LA 등 90여 지역 동시집회(5/3 내일신문)

미국에서 5월 1일 메이데이, 국제 노동절을 맞아 반이민법을 저지하고 이민개혁을 관철하려는 이민자 대행진이 90여개 도시지역에서 수십만 명이 참석. 주최 측 주장 50만, 경찰추산 20만 명. 로스엔젤레스 이민자 행진에만 적어도 6만 명, 텍사스 달라스에서는 2만, 뉴욕에선 주최측 2만 명, 시카고는 주최측 2만 명 등.

올해 국제노동절 이민자 행진에서 무엇보다 사상최약으로 꼽히는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이 앞으로 90일 후인 8월부터 실행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데 이민자들과 이민옹호단체들이 힘을 결집.

결모습만 보고 불법이민자로 의심될 경우 불심검문해 체포할 수 있고, 서류미비자들을 형사범죄자로 처벌하려는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을 허용할 경우 미 전역으로 반이민 기류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투쟁과 정치적 세력집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것. 올해 이민자 행진에서는 워싱턴 정치권이 더 이상 포괄이민개혁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다루도록 압박을 가한 것. 1000만 유권자를 가진 라티노 유권자를 비롯해 이민사회와 이민옹호 유권자들이 표심을 합칠 경우 이민개혁에 공화당이 결사반대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고는 있으나 포괄이민개혁 법안을 반드시 올해에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새로운 이민개혁안의 골격을 토대로 포괄이민개혁법을 만들고, 공화당 상원의

원들의 지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데이비드 엑셀로드 정치보좌관은 “이민개혁법안이 적어도 올해에는 착수되어야 한다” 며 초당정치 분위기만 조성되면 올해 안에 성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 그리스 긴축정책

1) 그리스 ‘긴축정책’ 반대 시위…최소 3명 사망 (한겨레 5/6)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그리스 정부의 초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5일 벌어져 최소 3명의 시민이 숨지는 등 그리스 상황이 급격히 악화. 이와 함께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하락을 이날 경고하고 나서는 등, 그리스뿐 아니라 유로존 위기 또한 다시 확산될 기미.

이날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는 수만 명이 공공부문 임금 동결과 연금 축소 등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이날 전국적으로 노조 쪽 추산 20만~25만명, 경찰 추산 10만 명이 시위에 나서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 이 가운데 일부 시위대가 은행과 상점에 화염병을 던지면서 한 은행에 불이 붙어 3명이 사망. 세무서 등 다른 건물에도 불이 붙었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돌을 던지는 시위대에 맞섰다.

그리스 에너지·교통 부문 노동자들은 5일, 전날부터 파업에 들어간 공무원들과 합세해 총파업을 벌였다. 모든 공항이 마비돼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못했고, 기차와 여객선 운행도 중단됐다. 북부 항구도시 테살로니키에서도 2만 여명이 거리로 나왔다.

그리스 국내뿐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도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회의론. 금융시장의 냉담한 반응은 구제금융이 채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도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여전하기 때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리스가 지원금으로 채무 상황을 계속하더라도, 지난해 13.6%까지 증가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2012년 말에 가서도 14%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전함.

2) 의회 긴축대책법안 오늘 표결처리(5/6 서울신문)

200만 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보유한 노동자총연맹은 이날 24시간 총파업. 이와 별개로 전날 48시간 총파업을 선언한 공공노조연맹(조합원 50만명)도 이틀째 총파업. 공항 관제사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아테네 엘레프테리오스 베니젤로스 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은 이날 하루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 운항이 완전히 멈춤. 파업 여파로 지하철, 시내버스, 철도, 여객선 등 대중교통과 정부기관, 세관·세무서, 국·공립학교까지 폐쇄. 자영업자 조직인 상인연맹, 전문직과 영세제조업체 조직인 전문직·영세제조업연맹도 6시간 동안 철시.

광범위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권 사회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는 6일 긴축대책 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전망이다. 프랑스 하원도 전날 그리스 지원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김. 독일은 7일 의회에서 표결할 예정. 그리스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300억유로(국내총생산의 11%) 감축하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음. 특히 공무원 특별보너스 폐지·감축, 복지수당 추가 삭감, 민간부문의 월별 해고상한선 확대(2%→4%), 부가가치세 인상(21%→23%), 유류·주류·담뱃세 10% 추가 인상, 여성 연금수령 연령 상향(60→65세) 등.

3) 간신히 구제금융 받은 그리스, 이번엔 공무원의 '철밥통' 지키기(조선일보 5/6)

1100억 유로(약 161조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으로 한숨 돌린 그리스가 이번엔 ‘총파업’의 후폭풍.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 조건으로 300억 유로(약 44조원)의 재정긴축안을 제시하자, 임금 동결·삭감 조치를 받게 된 공무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파업에 나선 것.

이 같은 파업은 그리스 공무원들이 ‘철밥통 사수(死守)’에 나서면서 빚어짐. 그리스 정부는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3년간 임금 동결 △특별 보너스 폐지 △복지수당 8% 추가삭감 등을 약속. 술·담배에 대한 세금도 올리고, 부가세도 2%포인트 인상할 방침.

그리스 정부는 국가부도 위기를 막고 정부부채와 재정적자를 끌어내리려면 이러한 긴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그리스는 EU 국가 중 부패가 가장 심한 나라고, 임금은 2001년 대비 40%나 치솟았지만, 생산성은 제자리. 반면 노조 측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책”, “경기침체를 더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라며 반발. 현지 언론들도 “긴축안이

그리스인들을 질식시킬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반발.

4) EU 차관이 그리스 위기 해결하지 못할 것(4/22 레프트 21)

파노스 가르가나스 (그리스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

4월 셋째 주에 유럽 지배자들은 그리스 정부가 요청하면 2백64억 파운드를 차관해 주기로 합의. 유럽 지배자들은 그리스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두고 몇 달 동안 동요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기가 더 심화한 뒤에 구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그리스 정부에 노동자들을 대거 감원하라고 주문한다. 이런 해고가 구제의 조건. 유럽 지배자들은 이번 지원책으로 그리스가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일부 논평가들은 결국에는 부도를 피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독일 자본주의는 그동안 구제에 나서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독일이 “반그리스” 적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사실 그리스와 독일은 지난 10년 동안 매우 밀접하게 협력해 왔다. 2004년 올림픽을 치르려고 그리스가 새로운 공항을 건설할 때 독일 건설회사 호치티에프가 계약을 따냈고 여전히 그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가 매각한 헬레닉 조선소는 독일 거대 기업 티센크루프에 넘어갔다. 그리스 텔레콤(OTE)은 독일 텔레콤으로 넘어갔다. 올림픽 에어웨이는 루프트한자가 인수했다. 독일은 그리스를 지키는 데 이해관계가 매우 크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맞서 싸워 왔고 4월 21일과 22일에 새로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차관 제공은 노동계급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불러올 것이다. 그리스 투쟁에서 그리스 공산당은 모순된 구실을 했다. 2008년 12월 항쟁이 발생했을 때 그리스 공산당은 보수적 태도를 취해 학생들의 학교 점거를 반대했다. 심지어 공산당 청년 조직이 학생 총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그리스 공산당은 2008년 12월 투쟁이 진정한 항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공산당 서기장은 ‘진정한 항쟁에서는 단 한 장의 창문도 깨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했다.

공산당이 주도하는 노조인 전노동자 전선(PAME)은 2009년 12월 17일 신임 사민당 정부 아래 벌어진 최초의 파업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리스노조총연맹(GSEE)이 그날 파업을 벌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파업의 동력은 기층에서 나왔다. 처음 파업을 제안한 것은 반자본주의좌파(ANTARSYA, 그리스사회주의노동자당이 참가하는 극좌파 연합)에 정치적으로 가까운 일부 교사 노조들이었다. 그러나 PAME의 지지가 이날 파업의 성공에서 매우 중요했다.

그 뒤부터 2월 10일, 2월 24일, 3월 24일 세 번의 하루 총파업이 있었고 갈수록 규모가 더 커졌다. 총연맹의 노조 지도자들도 태도를 바꿔 그리스 사민당 정부와 유럽연합이 IMF와 함께 강요하는 ‘안정화 계획’에 반대하는 공무원과 노동자 총파업을 지지하게 됐다.

그러나 파업 규모가 커질수록 PAME의 구실은 작아졌다. 이것은 PAME의 종파주의 때문이었다. PAME는 다른 노조들과 함께 연합 파업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기를 거부하고 언제나 별도의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17일 PAME 집회는 다른 좌파의 집회보다 훨씬 컸다. 그러나 올해 3월 11일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스사회주의노동자당(과 ANTARSYA)은 PAME와 공산당에게 함께 파업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공동 행동을 지지하지만 그들의 종파주의는 비판하고 있다. 우리와 공산당은 모두 4월 21~22일 48시간 총파업을 벌이자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산당이 과거에 한 배신을 잊지 않고 있다. 공산당은 2008년 12월뿐 아니라 1973년 11월(군부 독재 반대 항쟁)과 1989년(공산당과 보수당 연정)에도 배신한 적이 있다.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특이사항 없음

■ 한국경제

특이사항 없음

■ 한국정세

1. 미·중·러 ‘북 6자회담’ 희망... ‘천안함 올인’ 한국 고립되나 - 6자회담 엇갈린 기류
중·러 “6자회담 이룰수록 좋다” 반색, 미, 천안함서 ‘6자’ 로 서서히 관심 이동, 한국, 6자 뒤로놓고 “천안함 규명부터” (5/6, 한겨레)

2. '악전고투' 노회찬·심상정, TV 토론도 못 나갈 판천안함에 밀리고 당세에 치이고...진보신당 '설움' (5/4)
KBS 선거방송준칙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 참석 조건을 △국회 원내 5석 이상 정당 후보자 △언론사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0% 이상인 예비 후보자 △직전 전국 선거 10%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TV토론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무법천지' 이른 한나라당 의원들의 '떼법시위' - 범법 알면서도 전교조 명단 공개...'조폭 의원' 비난 직면 (5/6)

4. MB-한나라당 지지율 동반상승 - "천안함 침몰 이전 회복"...민노 3.5%, 진보 2%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주간 정례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는 47.9%로 지난주에 비해 3%포인트 상승했고, 한나라당은 42.6%로 2.1%포인트 상승했다.
타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0.9%포인트 하락한 25.8%를 기록했으며, 3위 자유선진당은 4.6%를 기록했다. 4위 민주노동당은 0.2%포인트 하락한 3.5%였으며, 5위 국민참여당은 2.6%, 6위 진보신당은 0.7%포인트 상승한 2%를 기록했다. 7위는 창조한국당으로 0.7%였다.
대선후보 지지율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30.4%로 1위 자리를 지켰으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처음으로 대선후보군에 포함된 한명숙 전 총리가 12%지지율을 기록하며 2위로 올라섰고, 유시민 전 장관이 9.7%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9.6%), 김문수 경기도지사(7.6%), 오세훈 서울시장(7.3%) 순이다.

5. 오세훈-한명숙, '진검승부' 막 오른다 / 민주당, 6일 서울시장 후보 결정... D-27, 결과는 '예측불허' (5/6 오마이뉴스)
민주당은 5월6일 오후 한명숙·이계안 두 후보를 놓고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 짓게 된다. 이번이 없는 한 한명숙 전 총리의 본선 진출이 확실시된다.
사실상 범야권 단일후보로 추대받은 한 전 총리는 아직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은 평균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 전 총리는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 노동

1. 총연맹

1) 근심위 날치기

- 5월1일 새벽 2시40분경 근심위 공익위원안을 날치기 상정 처리, 참석한 노동대표를 노동부 직원들이 감금하고 불법 부당한 투표 진행,
- 통과된 내용은 50명 미만 0.5명, 100명 미만 1명, 1000명 미만 3명, 5000~9999명 11명, 10000~14999명 14명, 15000명 이상 18명, 이렇게 되면 현자지부 전임자 91%감소, 철도본부 전임자 73%감소 등 대공장 노조와 공공사업장 등 대기업 노조 무력화시도가 명백히 드러남.

2) 지방선거 체제 돌입

- 총연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지지후보 선정을 위한 1차 심의에 들어갔음. 또한 51절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조합원 참여운동을 시작, 본격적인 지방선거 총력체제에 돌입.
- 지난 3월24일 중집에서 진보정당 통합후보, 반MB연대 단일후보 지지방침을 확정했음. 수도권 야권연대 결렬, 진보신당 독자노선 고수 등 지지후보 선정에 변수가 생겼지만 각 지역별 단일화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지지후보 확정은 4일 2차 심의를 거친 이후 확정 됨. 총연맹은 5월14일 이전에 최종지지후보를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

2. 금속

1) 금속노조 개악노조법 무력화 투쟁 선언

- 금속노조는 4일 근심위 날치기 타임오프한도 결정에 반발, 개악노조법 무력화 투쟁을 선언함. 또한 개악노조법 투쟁을 임단투와 연동하는 입장도 발표함. 금속노조는 2010년 임단협 요구에 노조전임자 처우 보장 및 노조활동보장 등의 요구를 넣어 이 문제를 노사자율 원칙에 입각, 사용자와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더불어 사용자들이 날치기 결정된 타임오프를 들먹이며 합의를 거부할 경우 노조는 요구안이 담긴 을 임단협 쟁취 때까지 타결시기를 정하지 않고 파업투쟁을 벌일 것임을 강조.

2) 5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측, 금속산업최저임금 동결 요구

-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협의회 5차 중앙교섭이 4일 열렸음. 이 자리에서 노조는 최저임금 동결은 금속산별협약이 갖는 사회적 책무를 묵인하는 것이라 비판했음.
- 사용자 협의회는 법정최저임금보다 금속산별 최저임금이 월등히 높다며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동결을 요구했음. 또한 최저임금을 사내하철에도 적용하지는 노조 요구에도 사용자 협의회는 직접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계약관계인 제3자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잘라 말함.

3. 공공

- 구두 발제

4. 기타

1) 운수노조 철도본부, 교섭 진전 없으면 5/12 파업 돌입

- 4월30일 투쟁을 연기했던 철도노조가 5월12일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음. 단협해지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철도공사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단협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 했음.

■ 여성

특이사항 없음. <끝>